

문재인 정부의 표리부동 말은 소득주도성장, 실천은 신자유주의 이윤 보장



'소득주도성장'에
턱없이 부족한
2019년 예산안

3면

계속되는 문재인 개악

의료 영리화 허용

규제프리존법 12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3면

미중 무역 전쟁과
북미협상 교착

4~5면

베네수엘라 위기는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7면

낙태죄 폐지하라

9면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2면

혁명적 조직 건설하기

6면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정선영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센트(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1·2)에게는 7~35퍼센트에 달하는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 최하위 등급의 경우 1주기 구조조정 때는 정원의 15퍼센트를 감축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처럼 정부의 대학 지원이 미비하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35퍼센트 정원 감축은 사실상 학교 문을 닫으라는 압박과 같다. 이미 1주기 평가 때 최하위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의 60퍼센트가 폐교했다. 이번에는 그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최하위 대학이 아니더라도 많은 대학이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대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2021학년도 대입자 수가 올해 정원인 48만 3000명에 비해 5만 6000명 부족해질 것이고,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곧장 대학의 존폐 위기로 이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제까지 정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주의적으로 운영해 온 탓이 크다.

한국은 고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9877달러로 OECD 평균(1만 5028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국립대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75퍼센트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 지원은 그나마도 절반가량이 상위 20개 대학에 집중돼 있다. 전체 대학의 3분의 1가량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퇴출을 유도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이제까지 교육을 무계획적으로 시장에 맡겨서 생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폐교 대학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 교·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다. 폐교 대학의 교·직원들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해고자가 된다. 200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16곳이 강제 폐쇄되거나 자진 폐쇄했는데(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4곳), 이런 대학의 교직원들이 소



공영형 사립대는 대국민 사기 공약인가 8월 28일 진보 교육 단체들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리 없이 잘려 나간 것이다.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닌 죄박에 없는 학생들은 '부실' 대학의 '부실'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편입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실제 편입율은 44퍼센트에 불과하다.(2014년 김태년 민주당 의원 발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더욱 제한되는 것도 볼 보듯 뻔한 일이다. 부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이 되는 상황에서 주로 가난한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 퇴출 문제는 단지 일부 대학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퇴출을 피하려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대학 전반에 시장주의적 운영 방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지난 20여 년간 대학 구성원들은 시장주의 교육 정책 때문에 몸살을 앓아 왔다.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10년간 인문, 사회계열 입학 정원은 1만 명가량 줄어 들었다. 반면 공대 정원은 1만 명가량 늘었고 의약 계열은 2배로 늘었다. 인문·사회·자연·예술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학과 통폐합 때문에 자신의 학과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일상이 돼 버렸다.

학생 선별 기준의 엄정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필요에 맞춰 상대평가가 강화되고, 재수강 기준 등도 강화됐다.

교·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각종 비정규직 교수와 직원이 늘어났다. 대학이 수익성을 좇다 보니 열악한 비정규직 교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졌다. 기업의 이름을 딴 화려한 건물들은 늘어났지만 청소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게실 하나 없다. 학생들의 자치 공간도 줄어들었다.

대학 당국들은 대학 순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학내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학 서열화, 지역 불평등, 교육에서 계급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이 높다며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난 수년간 청년 실업은 오히려 악화했다. 4년제 대졸자의 고용률은 2006년 76.6퍼센트에서 2015년 72퍼센트로 감소했고, 정규직 취업률도 2006년 63.1퍼센트에서 2015년 52.5퍼센트로 감소했다.

진정한 문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안정적 일자리를 줄여 온 기업주와 정부에게 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진정한 문제를 가리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낸다.

교육 받을 권리

대학 구조조정 추진 요인에 단지 학령인구 감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봐야 한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정부는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에선 인력이 부족한데 대졸 청년들은 '눈높이'가 너무 높다며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을 강조하고 고졸 취업률을 높이려 했는데, 여기에는 '청년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대학에 가지 않고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청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돼 있다. 실제로 2009년 77.8퍼센트 이던 대학진학률은 2017년 68.9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대학은 자본주의적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소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 발달을 이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의 두 배나 되는 현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 퇴출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부실' 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립대학들을 국공립화하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은 "교육 공공성 확대"를 말했지만 뻔뻔스럽게도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발표된 내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대학 지원 예산을 4500억 원가량 늘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려면 4조 원 넘게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며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와 독립적인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며, 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공격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강동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이 이를 거세게 비난하는 가운데 8월 2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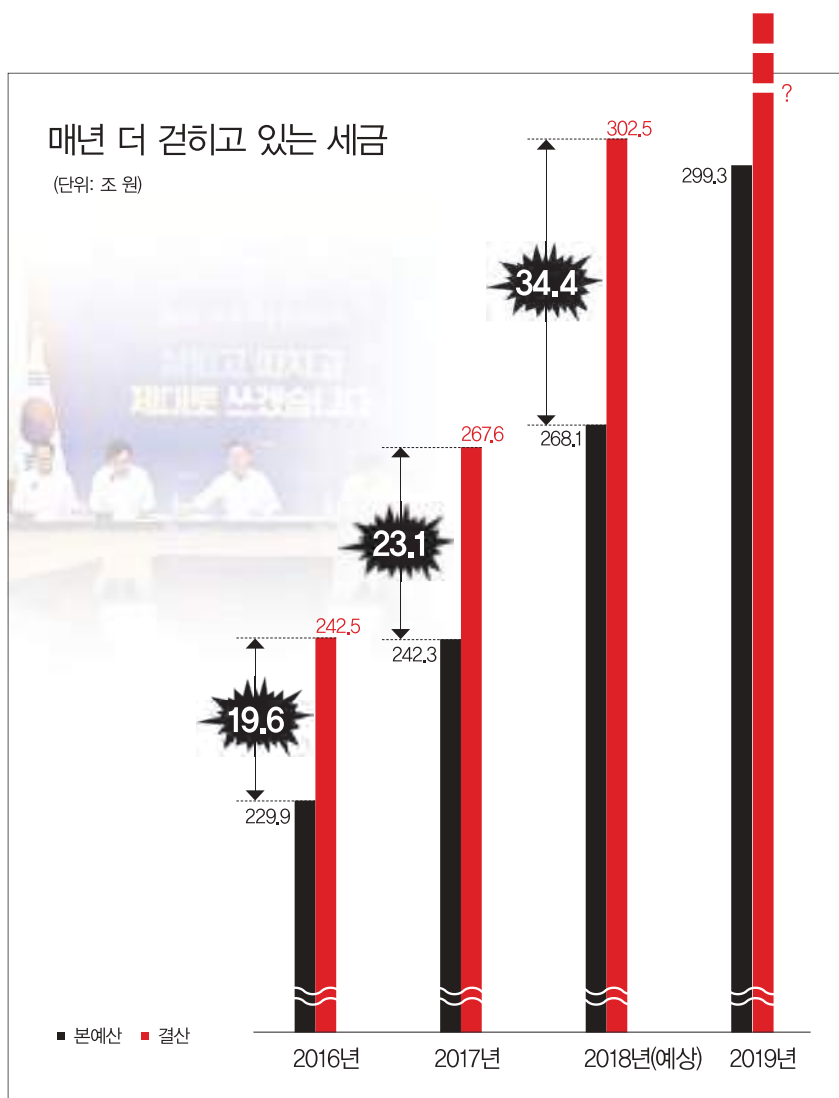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퍼센트(41조 7000억 원) 늘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명목성장을 전망치(4.4퍼센트)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예산을 10.6퍼센트 인상한 후 최대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론’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장하성 예산’,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비난하고, 대대적 삭감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보수 언론들도 내년 예산안이 “초수퍼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했다. 이 언론들은 박근혜 정부 때도 매해 예산안 발표 때마다 “슈퍼 예산”이라고 호들갑을 떠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실제 예산 정책은 재정 지출 규모를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묶는 긴축 재정 방안이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410조 1000억 원)보다 4.6퍼센트만 늘린 균



형재정 예산안이었다. (본지 220호에 실린 기사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우파의 호들갑과 정부의 생색내기를 걷어 내고 그 실체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예산안도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재정 방안이기는커

녕 보수적인 균형재정 원칙을 지키는 안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퍼센트로 올해의 1.6퍼센트와 큰 차이가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9.5퍼센트에서 내년에는 39.4퍼센트로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예년보다 늘어나는데도 적자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세입 증가분을 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입은 265조 4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3조 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본예산에 추경예산을 더한 것)에 견줘도 14조 3000억 원이 더 건넜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세금 20조 원이 더 걷혔고, 올해 전체 초과세입은 34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34조 원(지난해 14조 원, 올해 상반기 20조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30만 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이 안 되었다고 비판했다.

올해보다 늘린다고 정부가 홍보한 내년 지출 규모가 41조 7000억 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이미 4조 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보다 늘어나는 내년 예산 증가 규모는 37조 8000억 원이다. 실제로는 지출 증가라는 게 대략 지난해와 올해의 초과세입분을 더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보수적인 세입 전망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을 올해 예산안보다 31조 2000억 원(11.6퍼센트) 늘어난 299조 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실제 세입 302조 5000억 원보다도 적은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세금이 남을 공산이 상당히 크다.

이처럼 지출 확대를 자제하다 보니 복지 예산 증가가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조기 인상하기로 했지만, 증액의 상당 부분은 자연 증가분이다. 경기 침체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돼야 하는데도 말이다.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시범사업 4곳의 예산만 편성됐다. 내년이면 벌써 집권 3년차인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후퇴한 공약조차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와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일 뿐 아니라,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다. 이 때문에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반면, 아직 법률이 통과하지도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은 편성했다.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의료 영리화를 촉진하는 예산들도 포함됐다. 올해 중으로 의료 영리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도 2008년 이후 최대인 8.2퍼센트(3조 5000억 원)이다.

이처럼 이번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도 들어온 만큼만 더 쓰겠다는 예산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 저소득층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기 힘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신정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8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두 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가’안은 연금액을 올해 수준으로(자기 평균 소득의 45퍼센트)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당장 내년에 20퍼센트 인상하는 안이다.(소득의 9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나’안은 2007년에 정한 대로 앞으로 연금액을 자기 평균 소득의 40퍼센트까지 낮추고 보험료를 50퍼센트(!) 인상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7세로 늦추고 오래살면 더 깎는다. 말이 두 개의 안이지 답을 정해놓고 협박하는 식이다.

전자가 연금 삭감과 보험료 인상의 폭이 작지만,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동의한



노동자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

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추진 속내를 드러냈다. “국회 입법 과정 그 자체도 국민 동의의 과정”이라며 국회를 통한 일방적 강행이 ‘국민 동의’라면서 말이다.

제도 개선안 발표 후, 보험료 인상 추진과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등 여론의 반발과 불안이 일자, 문재인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국가의 지

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알맹이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정작 핵심 논란거리인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의 ‘인상 불가피론’을 굳히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인상하겠다는 분명한 언급도 없었다.

동시에 문재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다층적 연금체계]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용돈 연금’ 수준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에 불안을 느껴 사적연금에 가입하겠는가. 실제로 그간 유럽 등지에서 ‘다층적 연금체계 강화’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논리 속에서 제기돼 왔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 진영은 노동자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고, 소득대체율 향상에 따른 재원은 부자들과 기업주들에게서 마련하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강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주요 단체 대표자들의 입장에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8월 23일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운동·진보 진영의 주요 토론자들은 옹계도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향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적잖은 인사들이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점은 유감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교훈

더불어 소득대체율 향상과 이에 필요한 자원 마련(보험료 인상 포함)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월 22일 중앙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는데, 국민연금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참가 필요성이 주요한 근거였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국민연금 개정 논의 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개악을 막고 개혁을 얻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넌센스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당시 연금 운동 내 개혁주의자들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받는 대신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며 사회적 대화 기구 참가를 적극 주장했다. 이후 국회 내 설치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부 인과 유사한 최종 개악안이 도출됐다. 공무원연금 개악도 막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삭감액 일부를 국민연금 강화 등을 위해 쓰겠다는 합의도 이후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다고 해서 문제의 핵심이 달라지진 않는다.

경제 위기 시기에 제대로 개혁을 성취하려면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중심을 두지 말고, 개혁을 얻어 낼 진정한 힘인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이정구 한신대 경제학과 강사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를 만난 한 하원의원이 “그[트럼프-인용자]는 세계무역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약간의 고통은 기꺼이 감수하려 한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우쭐대고 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높였다. 또한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에서 탈퇴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로는 EU(특히 독일), 일본 등이 있지만 단연 선두는 중국이다. 2007년 미국 무역적자 중 32퍼센트가 중국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대중국 적자액이 3700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47퍼센트로 늘어났다.

둘째는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의 기술, 품질 등 경쟁력은 미국에 열세이고 노동생산성도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 왔고,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2015년 중국 국무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2025*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30년 동안 정보통신,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전기차, 전력,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해 제조업 강국이 되고자 한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은 바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세계시장 쟁탈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고 있고 이것은 무역전쟁에서 승리한 덕분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은 4.1퍼센트로 분기별 성장으로는 돋보이는 기록이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올해 3퍼센트 성장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미국은 2.3퍼센트 성장으로 선진국 평균(2.4퍼센트)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퍼센트라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성장



률 수준인 3.3퍼센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이윤율*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연구소들은 2019년과 2020년 미국 경제가 약간 하락해 2.5~2.7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킨 게임

그런데 미국 경제의 부분적 회복조차 무역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트럼프의 경기부양책*과 규제완화 때문이다. 2017년 12월 트럼프는 향후 10년 동안 법인세를 33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면했는데, 이는 31년 만의 최대 감면이었다. 이 때문에 10년 동안 1조 5000억 달러어치의 세수가 줄어들고 이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양적완화*와 부분적 경기 회복으로 생긴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지금까지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고도 올 하반기에 2~3차례 더 인상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을 비난하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이 건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양적완화로 신흥국으로 흘러간 달러 자금을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게 만든다. 그 결과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신흥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이때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 취약한 신흥국들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신흥국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돈으로 내몰 수 있고, 이런 혼돈이 다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터키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남아공 네드뱅크의 하이네크와 다야 분석가는 “터키는 잊어라. 방 안의 코끼리는 아

시아다” 하고 주장했다. 2009년 이후 아시아의 달러 부채가 2조 달러가 넘는 데 비해 터키는 1900억 달러, 아르헨티나는 1200억 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전쟁이 미국의 판정승으로 끝난 게임은 결코 아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하는 규모가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관세라는 수단에서는 미국의 우세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을 동원해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반도체기업 쉐랑의 네덜란드 회사 인수를 중국이 반대한 일이다. 중국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0퍼센트로 인상하자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는 상하이에 50만 대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생산으로 판매하는 규모가 223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겨루는 치킨게임이 될 공산이 크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연일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한다. 4월에 비해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10퍼센트 정도 평가절하*됐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효과를 누그러뜨리며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도 시진핑에겐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2015년에 경험한 바처럼,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외국(뿐 아니라 중국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 때문에 외환시장의 혼란과 주식시장·채권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전부터 경기둔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기업부채(부실채권)*의 증대,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세 가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 부실채권이 165억 위안다. 국유기업의 잠재된 부실을 고려하면 부실채권의 규모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8퍼센트로 미국(72퍼센트)이나 유럽연합(105퍼센트)보다 더 높다. 시진핑은 몇 년 전부터 기업부채를 줄이려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

기둔화를 우려해 시중 은행들에게 인프라 투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을 제외한 대다수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둔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 때문에 부동산 상품의 재고 소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림자 금융*도 최근 대폭 증대했는데, 2011년 GDP 대비 29.6퍼센트에서 2016년 62퍼센트로 급증했다.

시진핑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쉽사리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지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 지도자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이다.

위기의 한국 경제

8월 19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중국 그림자의 공포”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었던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은 이제 침식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던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기업가 신문답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은 포기하고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마무리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 하락했고, 제조업 가동률이 7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국내 기계 수주액이나 자본재 수입액 모두 하락하고 있다. 심지어 건설 수주액도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경기후퇴 국면에서 경기침체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사정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641개 상장기업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를 뺀 상반기 순이익은 오히려 6.6퍼센트 감소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윤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 5면으로 이어짐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김영익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계를 미·중 제국주의 간 경쟁의 종속 변수로 보고 있음을 이토록 솔직하게 밝히는 미국 대통령은 처음 났다.

트럼프 정부는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을 계속 압박해 왔다. 협상 테이블이 열렸는데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는커녕 외려 추가 제재 조치를 잇달아 강행했다.

북한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했던 듯하다.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징적 조치일 테지만, 이는 평화협정 협상의 개시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벌써 머릿속에서 지운 것 같다.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자산을 신고하고 미국이 그 신고를 검증한 후에, 미국도 반대급부를 내놓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1년 내에 비핵화하라고 북한을 채근했다.

미국의 선 비핵화 강요, 북한의 반발은 너무 낮은 장면이다.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등 세부사항에서 튀어

나온 견해차로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도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북한의 양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8월 28일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연합훈련을 계속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명백한 대북 협박이다.

1993~1994년 북핵 위기 시기에 당시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이 1993년에 재개되자 긴장이 급격히 치솟은 바 있다. 이번에도 훈련이 재개되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는 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좀 더 지속할 듯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정세 등 트럼프가 대응할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사했듯이, 무역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 간 갈등 때문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 영향을 받는 북·미 협상은 “느리고 험난한 과정”(미국 유엔대사의 표현)이 돼 있다. 일시적 긴장 완화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 지속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한동안 진여권 전문가와 언론들은 미국 주류 정치권 출신이 아닌 트럼프가 미국 주류 다수와 달리 “본의 아니게” 한반도 평화 체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그런 기대가 점점 무색해지는 일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것 같다.

▶ 4면에서 이어짐

그런데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퍼센트나 되는데, 그중 70퍼센트 정도는 중간재 수출이다. 즉, 중간재가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바뀌어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다. 그래서 무역전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역전쟁의 영향

미·중 무역전쟁은 두 제국주의 국가가 벌이는 경쟁과 갈등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이 강화될 것이다.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견제나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위협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1930년대 무역전쟁이 제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제

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설사 지금의 무역전쟁이 1930년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태가 위험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또한 무역전쟁은 국가 간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강화한다. 유럽에서는 우익 포퓰리즘의 득세로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우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족주의는 중간계급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심지어 중간계급이 앞장서서 민족주의를 부추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계급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가 그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노동계급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노동계급이 단결하고 전진할 수 있는 혁명적 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갈등이 핵심 변수임을 드러낸 트럼프

문재인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은 어디로?

북·미 협상이 난항을 빚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9월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도 다소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우향우를 계속하면서,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더 더욱 중요한 일일 테다. 남북관계 발전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게 막으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기대하는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발전으로 북·미 협상을 추동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거창한 말에 비해 실전은 보

잘것없다.

4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철도·도로 연결 등 공언한 바는 많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대북제재 때문에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개성공단 재개는커녕, 겨우 직원 20~30명이 상주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미국의 반대와 폼페이오 방북 취소의 여파로 개소식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

진보 측의 상당 부분은 이런 문제가 문재인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끌려가는 탓이라고 여긴다. 물론 그런 점도 분명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라는 측면도 엄연히 있다. 문재인은 임기 첫해 스스로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자고 트럼프와 합의했다.

‘한반도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선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 가며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평화네트워크 정육식 대표조차 이 대목에서 미국이 안심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면서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퍼센트나 인상했다.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의 군사비 증가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의 “군축”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강점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주변 정세의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의 친미적 선택은 이 정부의 강점을 어느 순간 약점으로 바뀌 버릴 수 있다.

용어설명

관세와 비관세 장벽

국경을 넘는 재화에 부과하는 조세다. 이에 비해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등이 있다

WTO, TPP, 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들이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각종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99년에 발효됐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불참을 선언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94년 체결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고 한미FTA는 2008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제조2025

2015년 시진핑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제조업 고도화(고부가가치 고기술) 전략을 의미한다.

이윤율

투자한 돈에 대해 벌어들인 총이윤의 비율이다. 이윤을 위해 경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

어지는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자본가들이 생산을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극제이며 축적의 조건이고 추진력”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책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보다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시장에 많이 공급하는 등의 정책을 말한다. 보통 케인스주의 정책이라 한다.

양적완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제로 금리가 된 후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었던 정책이다. 시중에 돈을 풀면 금리가 더욱 떨어져 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돈이 많아져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한다.

환율조작국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평가절하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만약 7위안에 1달러 하던 가치가 0.9달러로 떨어지면 중국이 달러로 상품을 수출할 때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부실채권

기업이 발행한 어음(회사채라 한다)에 대해 값을 수 없게 된 어음을 말한다. 악성채권이라고 하고 이런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한다. 부실채권이 실제로 값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디폴트라 한다.

그림자 금융

은행과 비슷하지만 은행감독기관의 감시와 규제를 받지 있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말한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구조화 투자회사, 투자은행 등을 말한다.

경기선행지수

경기 동향 예측에 이용되는 지표.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등이 포함된다.



혁명적 조직 건설하기

이하는 지난호에 실린 **알렉스 캘리니코스** 연설의 속편에 해당한다. 독취와 초역을 해 주신 한가는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서구에서는 여러 단체들의 지향점이 수렴한다”는 한 동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렴점은 인종차별적 우익의 부상에 맞서 되도록 광범하면 서도 투쟁적인 대중을 모아 내는 공동 전선 건설을 실천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획한 것 이라기보다는 역사가 우리 앞에 던져 놓은 과제가 가깝습니다.

2000년대 초에도 우리는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각 자매단체의 활동이 수렴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만큼 공통점이 크지는 않았습니니다. 지금은 비슷한 활동을 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 비슷한 활동을 위해 서로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 독일 동지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단체의 많은 동지들이 온갖 활동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종의 파편화에 시달린다고 말한 대목이 그것입니다. 제가 속한 SWP(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 건설에 우선순위를 뒀야 한다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흡사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일부는 정치적 이전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활동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큰 그림을 보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명료함

그런데 단지 실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명료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때마다 번번이 우리에게는 기존 관성이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관성은 바로 2000년대 초 운동에 참여했을 때 생긴 것입니다.

당시에 운동이 엄청나게 부상해 좌파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고, 국제 사회주의 경향의 각 자매단체들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선거에서도 전보다 청중이 훨씬 많아졌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지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동이 후퇴하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은 분열·분화했고, 꽤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2~2013년 SWP가 겪은 위기도 (물론 당시 쟁쟁 자체의 고유한 원인과 동화도 있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최근 몇 년간 해가 거듭될수록 제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지적 관심이 되살아나는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이



혁명적 좌파는 SNS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지만, 정치적 훈련과 투사들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종이 신문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된다

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중요한 차이점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흐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허비가 가장 저명한 대변자입니다. 이 흐름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관한 각종 논쟁을, 특히 사회재생산 이론으로 여성차별을 설명하려는 시도들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국제사회주의 경향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활동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큰 그림을 보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향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바로 “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으로 생산 과정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허비는 자본주의에서 생산한 아

니라 순환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여 왔고, 이를 위해 꽤 멋진 파워포인트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계급투쟁을 과거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 즉 계급투쟁을 직장(알타)에서뿐 아니라 직장 바깥에서도 벌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가장 큰 계급투쟁 중 몇몇은 노동자들의 직장 바깥에서 벌어졌는데, 예컨대 주민주권 반대 투쟁(1990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런 시도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직장에 기반한 계급투쟁 수준이 너무 미약한 불운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급투쟁 수위가 낮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들로도 자본주의를 타도할 운동은 충분히 건설할 수 있어.”

그러나 저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게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20세기에 봤듯이, 대중 파업 속에서 노동자 위원회가 등장하고 노동자 투쟁이 더 강화되는 등등의 패턴, 바로 그런

패턴 속에서 진정한 혁명적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흐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허비가 가장 저명한 대변자입니다. 이 흐름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관한 각종 논쟁을, 특히 사회재생산 이론으로 여성차별을 설명하려는 시도들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국제사회주의 경향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활동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큰 그림을 보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향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바로 “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으로 생

“자본주의라는 사슬은 그것이 버려진 곳에서 끊어져야”

이런 주장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매우 세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주장은 개 혁주의적 헛소리고, 사회재생산 이론가들은 엥겔스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 등등’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젊은 동지들을 내쫓는 결과밖에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동지들은 사회재생산 이론이 페미니즘의 현대적 버전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부활시킨 것이라 보고 있으니 만큼, 그런 [무시하는] 태도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는 사회재생산 이론과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젊은 동지들을 그 지점으로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티타 바타차리야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 즉 ‘자본주의라는 사슬은 그것이 버려진 곳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좌

취당하지만 동시에 체제를 집단적으로 박살낼 힘을 갖게 되는 곳은 바로 생산과정이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주장

을 부정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동계급 중심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결국 알맹이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주장인 동시에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 주장입니다. 이 사에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말시즘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그 어떤 미국 동지들이 지금 이런 흐름에 주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티타 바타차리야라는 여성은 영국을 자주 방문할 뿐 아니라 독일의 연례 말시즘 포럼에서도 연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매우 세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주장은 개 혁주의적 헛소리고, 사회재생산 이론가들은 엥겔스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 등등’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젊은 동지들을 내쫓는 결과밖에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동지들은 사회재생산 이론이 페미니즘의 현대적 버전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부활시킨 것이라 보고 있으니 만큼, 그런 [무시하는] 태도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는 사회재생산 이론과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젊은 동지들을 그 지점으로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합니

다. 저는 티타 바타차리야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 즉 ‘자본주의라는 사슬은 그것이 버려진 곳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좌취당하지만 동시에 체제를 집단적으로 박살낼 힘을 갖게 되는 곳은 바로 생산과정이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주장

보다 인간을’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이윤보다 인간을’]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둘수록 그 안에서 혁명적 핵심이 조직적이고 강력하고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점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아일랜드 동지들이 종이 신문 발행을 포기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SNS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SNS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토론을 통해 인스타그램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웃음) SNS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21세기에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ABC에 해당하는 말이고, 전혀 정점이 아닙니다.

전통의 계승과 창의성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종이 신문 없이 다른 일들을 모두 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지들은 새로운 것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하였는데, 저는 우리 혁명가들이 새로운 것에 따른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토니 클리프탄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진지한 혁명가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WP 역사는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며 새로운 분석과 시도를 하는 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는 결과가 안 좋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앞에 놓아 두고 겁먹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클리프가 레닌의 [좌파적 공산주의 - 유치권]에서 종종 인용한 말은,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실수에서 배우고 이를 재빨리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향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 특히 2000년대 초 운동에 관여했을 때는 온갖 구체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고 더 큰 관점을 이용해 그런 문제들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또다시 아일랜드 동지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

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윤보다 인간을’ [아일랜드 좌파 연합]은 영국 SWP가 10여 년 전에 리스펙트(RESPPECT)를 통해 이루어 했던 것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라고 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모호하지만 더 광범한 조직, 혁명적 성격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체제의 위기라진 것이 핵심적 이유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다른 동지들이 이미 범했던 실수를 피하라고 말하는 것

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보는데, 우리들이 실천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덕분에 방향성을 공유하고 건설적 논쟁을 벌일 큰 틀이 마련됐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베네수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을 두고 기성 언론들은 ‘사회주의 복지 정책의 처참한 결말’, ‘포퓰리즘의 파국’이라며 고소해 한다. ‘기형적 경제 구조와’ ‘국유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리스터 패로우**는 베네수엘라 위기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전략의 실패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우파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두고,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은 무엇이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의 혼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하이퍼인플레이션(1년에 수백 퍼센트 이상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베네수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이 100만 퍼센트에 이를 것이라 예측한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 국제 유가 폭락의 여파로 만성적 문제를 겪어 왔는데, 그에 뒤이어 이런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2014년의 국제 유가 폭락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낳은 여러 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베네수엘라의 보통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기초 식품과 의약품이 믿기 어려울 만큼 비싸거나 아예 구할 수조차 없다.

경제 위기라는 수렁에 더해, 베네수엘라 우파가 정부를 포위하며 벌이는 악독한 짓들도 무시할 수 없다.

저항

베네수엘라 우파는 역사의 시계를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불같이 성을 낸다.

우파는 20년 가까이 좌파 정부를 공격해 왔고, 쿠데타가 성공할 조건을 조성하려 해 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계적 경제 체제를 당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금융권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약 580억 달러(한화 약 64조 원)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재조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리겠다는 종언이다. 그런데 애초에 왜 해체했었습니까? 저는 그들이 정치 간행을 발간을 중단한 것, 정치 간행을 발간이 강제하는 정치적 훈련이 사라진 것이 핵심적 이유였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 우파는 위선적이게도, 니콜라스 마두로 현 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상대로 사용하는 폭력을 두고서, 좌파 정부가 불만을 다스리는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지목한다.

우파는 자신들이 자행하는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서 우파가 재집권하면 끔찍한 폭력이 온 나라를 휩쓸 것이다.

우파의 주장과는 달리,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보여 주

는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부자들에게 맞선 저항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경제적·사회적 핵심 부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우고 차베스와 그 후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정치에서 핵심은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위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베네수엘라에서는 한순간도 긴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 긴장은 공식 정치 영역에서 위로부터 벌어지기도 했고, 노동자·빈민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기도 했고, 때로 사용자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방어하면서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대중이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 올라 사태를 장악하려 한 아주 긍정적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2년 지배계급의 부추김을 받은 군부의 일부가 대통령령을 점거하고 차베스를 체포한 일이 있었다.

보통 사람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엄청난 세력의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쿠데타를 중단시켰다. 오직 그 때문에 차베스는 기사화될 수 있었다.

같은 해 말 베네수엘라의 기업주들은 경제의 대부분을 마비시킴으로써 차베스를 제거하려 했다.

이때는 노동자들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노동자들은 석유 생산을 재가동했고 운송과 식량 공급을 유지시켰다.

2년 후인 2004년에 부자들은 차베스를 “국민투표로 탄핵”하려 했다. 그 때도 대중이 봉처 우파를 꺾어 버렸다.

이 시기에 차베스 정부는 다수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원대한 개혁을 이루어 애썼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힘껏 보여 줬음에도, 차베스와 마두로는 그런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통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우가가 높을 때는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에게 도전하지 않고도 개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국내 언론들은 차베스의 개혁 조치를 문재인 정부

의 소득주도성장론 담론에 빗대지만, 차베스의 개혁(‘미시온’)은 그저 말잔치가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실질적 조치였다. 빈곤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교육·주거·의료·식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관해서는 본지 100호에 실린 “21세기 사회주의와 차

베스가 못다 이룬 꿈’을 보시오.] [처근저근 직권기인]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5퍼센트에서 71퍼센트로 늘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자 자본가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개혁은 더는 유지될 수 없었다. 기존 체제와 [그 수혜자인] 우파에게 도전하지 않고서는 혼돈을 피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에서 석유 수



우고 차베스는 문제인과는 달리 어느 정도 실질적 개혁을 이뤘고 대중의 큰 지지를 누렸지만, 그의 개혁주의 전략은 결국 한계에 봉착했다

출이 95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유가 변동에 특히 취약하다.

전략

차베스와 마두로 모두 경제를 다각화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 여파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베

네수엘라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2018년 5월 영국 노동당 예비내각의 재무장관 존 맥도넬은 어느 인터뷰에서, 차베스가 사망한 2013년 이후 마두로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마두로 정부가 잘못된 결정

했다. 맥도넬은 2018년 초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서도 마두로 정부의 실패를 언급했다.

맥도넬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부펀드(정부가 보완보유액의 일부를 투자 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를 조성해 석유 수출 수익을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돌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두로 정부가 잘못된 결정

한두 개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마두로 정부의 실패는 전략의 실패다.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건설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점차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 됐다.

마두로 정부가 여당 통합사회주의당 PSUV을 통해 노동자들과 관계 맺으며 노동자들과 반목하게 된 과정이 그 결정적 사례다.

[최근 몇 년 동안 PSUV는 노사 간 단체협약 갱신을 거부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의 변화를 법에 내밀거 왔다. 이

때문에 여러 산업 부문에서 노동조합 체제가 무의미해졌다.

이를 통해 마두로는 노동자들이 ‘국가

가 우리 이해관계를 대변하겠거니’

하며 정부 편에 서기를 바랐다.

이 전략은 급속히 뒤집어졌다. 마두로 정부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마두로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포장지를 쓰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들을 달래고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련의 경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마두로는 자신이 시행할 조치들이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흉악한 공격” [‘경제전쟁’]을 막고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감행한 공격은 그의 주장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마두로 정부는] 평범한 베네수엘라인 수십만 명의 생명줄인 석유 보조금을 없애 버렸고,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파 정부가 1989년에]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을 때, 베네수엘라 수도를 뒤쫓은 대중 봉기[카라카스]가 분출했

다.

마두로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2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올리려 한다. 부가가치세는 빈부와 상관 없이 매겨지는 일률 과세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세율 인상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

는다.

이에 더해, 마두로 정부는 화폐개혁을 단행해 만든 새 화폐 ‘볼리바르스베라노’를 유가와 연동된 가상화폐 ‘페트로’와 연동시켰다.

새로 결정된 월 최저임금 1800만 볼리바르스베라노의 가치는 약 30달러(한화로 약 3만 3000원)다. 이전에는 이보다도 약 1.3달러(한화로 약 1500원) 적었다.

이는 여전히 생필품과 공공금 지불을 위해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에 불과

하다.

정부는 이런 미적지근한 개혁을 할 때조차 [부자들을 위한] 중재 조치를 포함시켜야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개혁 이후 90일 동안 사용자들에게 노동자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것이므로 기업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마두로는 8월 초에 화폐개혁을 단행

했다. 이 조치는 마두로가 “제국주의 세력들”이 감행한다고 비난하는 “경제 전쟁”[공격]에서 잠시 숨 돌릴 수준일

뿐이다.

베네수엘라 우파는 이 기회를 노려 ‘총파업’을 단행했다.

상점과 작업장 다수가 문을 닫았다.

이 ‘파업’과 화폐개혁이 야기할 혼돈이 미칠 파장은 가능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우파와 미국 외교 당국은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보며] 기꺼서 어떤 줄 끌라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위기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좌파 정부 당선 물결의 핵심 고리를 파괴할 기회로 본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은 대부분 경제 제재 압력에 짓눌려 우파에 정권을 내어 주거나 [좌파적 개혁] 정책을 되돌려야 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보면, 좌파 정

부는 자본가들이 가하는 엄청난 압력

에 짓눌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정부라면 그 압력이 훨씬 클 것이다.

결론은, 그런 압력에 아래로부터 [투

쟁으로] 맞서야 하고, 국경을 넘은 연대를 제공할 국제 노동계급의 힘에 기대

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1호 번역 김준효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파업

실적급(포인트제) 폐지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장한빛

8월 29일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 지부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지속하다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 31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전 조합원이 상경해 파업 집회를 열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100퍼센트 자회사인 ‘홈서비스’를 만들고,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이 자회사로 고용하며 정규직 정책인양 생색을 냈다. 문재인 정부는 “SK브로드밴드를 벤치마킹하라”고까지 칭찬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존의 서비스뿐 아니라 “새롭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성장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동력과 효율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했다.

자회사 전환 이후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센터에서 받던 실적급이 없어져 임금이 하락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측의 자회사 전환 이후 추가 비용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정희태 교수)

자회사 고용 1년 만에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덩치 큰 하청회사”라며 투쟁에 나섰고, 90.9퍼센트라는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동자들은 실적급(포인트제)을 폐지하고, 최저시급 1만 원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전한 일터, 유연근무제 폐지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6월 29일 파업 출정식을 마치고 SK본사로 행진 중인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58만 원에 불과해, 수당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다. 개통 기사의 경우 110포인트 이후부터 수당을 받는데, 50퍼센트 가까운 노동자들이 그 포인트를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야간·휴일 근무 수당으로 임금을 벌충하고 있다. 한 포인트라도 더 따내기 위해 과로와 산재 위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또 포인트제는 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조합원에게는 일감을 적게 주거나, 포인트가 적은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SK브로드밴드 사측은 지난해 순이익이 304억 원이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엄살을 댄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의 상품 상당 부분은 SK텔레콤의 휴대폰과 결합돼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2017년 순이익이 무려 2조 6576억 원이었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 수익의 상당 부분이 SK텔레콤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최근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외면

하더니, 갑자기 ‘임금체계통합(안)’을 내놓고는 이에 대한 전 직원 투표를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강행했다. 이 안은 포인트제는 유지하면서 포인트를 조금 인상해 임금이 일부 오를 수도 있는 안으로,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사측은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4716명)의 과반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심지어 임금체계에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현장직군인데, 임금체계와 전혀 상관없는 노동자

열악한 조건과 차별에 시달리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당장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화력발전소(공기업인 발전5사)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77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고작 2퍼센트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발전소 운영의 핵심이자 상시·지속 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53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거의 진척이 없다. 사측이 이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려 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발전노조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투쟁에 연대했다. 노동자들은 수차례 서울 상경 집회를 열고 농성도 벌였다.

차별의 설움

필자는 8월 13일에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의 ‘공공부

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1차 순회투쟁’ 집회에 참가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전소 현장 방문에 동행해 현장을 취재했다.

필자가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둘러본 발전소 내부 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했다. 엄청난 열기로 방진복, 마스크, 안전모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의 방진복은 석탄 가루와 먼지 등으로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으로 옆 사람과 대화할 때도 큰소리로 해야 했다.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곳은 지상에서 수십 미터나 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발걸음을 떼야 했는데, 이동 통로가 매우 좁았다.

증언대회에서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 지부장은 그동안 겪은 차별을 발표하며 설움에 복받쳐 눈물을 쏟았다.

“원청인 발전사는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작업을 지시하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합니다. 하청업체들은 다음 계약에서 제외될까 봐 자기 업체 소속 비

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은폐하기 바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밥값은 더 내고, 점심시간은 정규직보다 15분이 짧습니다. 교대 노동자들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라면과 즉석밥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산재 문제도 심각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전5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337명인데, 그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327명으로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청업체들이 사고를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실제 산재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안기창 공공운수노조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논의 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체(이하 노사전협의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했다. 서부발전 노사전협의체에는 어처구니없게도 근로자 대표로 하청업체 소장이 참석한다. 서부발전 사측은 정규직화를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직고용되면 불이익이 크다고 거짓말하며 자회사 고용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한다.

외주화 확대와 경쟁 강화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발전소 외주화를 지목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발전소 운전·정비 부문을 본격적으로 민간 시장에 개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신규 설비를 중심으로 ‘정비 산업 경쟁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전5사 사장단, 정부 부처 공동 면담 자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발전사에 흡수하는 것보다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외주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이 빈 게데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이중잣대에도

들까지 포함시켜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제를 받을 것인지, 기존의 포인트제를 유지할 것인지만 선택하게 했다. 투표 기간에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투표를 강요했다.

사측의 압박으로 불공정한 투표가 진행된 끝에 사측 안은 과반의 동의를 얻었지만, 전체 노동자 중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를 보이콧한 노동자 수는 조합원 규모보다 많은 2000명 가까이 된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 안에 영향을 받는 현장직군 상당수가 반대하거나 보이콧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투표 강행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오른뺨을 때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왼뺨도 때릴 겁니다”라며 8월 29일 항의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때마다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가 수탁 업무 일부를 반납하면, SK브로드밴드가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진짜 사장이 SK브로드밴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할 뿐이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자회사 전환 이후 신규 조합원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그 힘으로 노동조합은 3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파업과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분노하고 있다. 사측이 발전소의 운전·정비 업무가 필수공익유지업무라며 파업권은 극도로 제약해 놓고서는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측은 이렇게 버티고 시간을 끌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일부 용역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돼 고용마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반기에 다시 힘을 모아 국정감사 시기에 자신들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려 한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2일 청와대 앞에서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농성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 순회 집중 집회를 열어 9월 28일 공동 투쟁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쟁취하려면 투쟁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8월 25일 비웨이브 주최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 신문을 제작하는 도중,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기습 공포한 낙태 수술 처벌 강화 규칙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시행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습 시행과 시행 유보가 생겨난 배경은 다음 번 기사에서 다루겠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시하고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의료관계 행정규칙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공포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크게 분노했다. 8월 25일 비웨이브 주최의 16차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약 2500명의 여성들이 모여 “여성 인권 탄압하는 행정부와 그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8월 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낙태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29일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유예일 뿐, 철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 합법화 여부를 또 다시 현재 결정으로 떠넘긴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28일 낙태죄 위반 심판 여부를 차기 재판부로 연기한다고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떠넘기기

복지부가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날치기’ 시행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는 “2016년 9월 23일 입법예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한 것이며 “낙태 처벌 강화가 아니”라고 우기는 해명을 내놨다.

터무니 없는 얘기다. 2016년 복지부의 입법예고 당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박근혜 퇴진운동의 여파로 개정이 무산됐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2일 한 여론조사 결과는 낙태죄 폐지가 51.9퍼센트로 유지(36.2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반 여부 심리 과정에서 ‘의견 없음’을 피력했다.

도대체 언제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는 것인가? 복지부가 날치기 시행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늘리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2016년 행정규칙 개정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도덕적 행위를 세분화해 진료 중 성범죄는 12개월로, 낙태는 예전처럼 1개월로 한 것”이니 낙태 처벌 강화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참말이 아니다. 기존에는 법원에서 낙태죄(형법 270조)로 실형을 받은 의료인에게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번 개정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에게 복지부가 법원 판결 없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결국 여성과 의사들의 항의,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부상으로 무산됐던 낙태 처벌 강화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되살리려 한 것이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자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떨었다.

SNS에서는 신뢰하기 힘든 낙태약 홍보가 활개를 쳤다. 이런 약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고 가짜약도 많아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그 위험성을 알리는 체크 리스트가 퍼졌다.

2010년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낙태 단속 강화 방침 발표 뒤 우익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면서 병원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일이 크게 늘어났다. 여성들은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당시 낙태 비용은 20배까지 치솟았고, 일부 여성들은 원정 낙태, 가짜 낙태약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낙태를 미루다가 임신 후기야 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도 벌어졌다.

낙태 불법화와 단속 강화는 여성들에게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어떻게든 낙태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낙태 금지의 여성들을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내몰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태로 내몰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임신·출산·양육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직 여성만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자격이 있다.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다. 낙태 불법화로 고통받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낙태 처벌 강화를 시도한 문재인 정부야말로 비도덕적이다.

낙태 불법화와 단속 강화는 여성 차별적일 뿐 아니라 계급 차별적이다. 비현실적인 낙태법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여성들은 청소년, 가난한 청년 등 노동계급 여성이다. 최근 원영석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총무이사는 “(불법 낙태 수술의) 90퍼센트가 빈곤층이나 미성년자다. 이들이 지금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술할 돈도 없어 힘들어 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자 여성들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안전하게 낙태하고 충분히 쉬 수 있다. 낙태 합법화는 노동계급에게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낙태는 사유와 기간 제한 없이 전면 합법화돼야 한다. 여성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병원에서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무상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수술뿐 아니라 사후피임약과 낙태약(미프진)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초기 낙태에 효과가 좋은 미프진을 도입하면 수술이 부담스러운 여성들도 조기에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다.

복지 대폭 확충하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낙태 처벌 강화를 시도한 것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듯하다. 올해 한국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지배자들은 저출산 심화로 미래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서 ‘국가경쟁력’과 국방력이 하락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현실을 크게 개선하기보다 노동력 재생산 비용과 노력을 개별 가정에 떠넘겨 여성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작동 방식이 여성 차별을 체계적으로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환경은 무시하고, 낙태 금지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발상은 여성을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최고 복지 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결혼·출산 유도를 위한 공공임대, 배우자 출산휴가, 돌봄 서비스 예산이 약간 늘어나긴 했다. 한부모 가족 지원액이 2배로 늘어 양육비 지원 대상이 14살에서 18살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13만 원에서 20만원으로(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35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급의 필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쾌적한 주택, 의료·양육·교육 등 복지가 대폭 확충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예산은 찔끔 증액했지만 올해 국방예산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당분간 국방예산이 계속 늘어나 2020년께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국가 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복지가 희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삶을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종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면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

낙태 합법화 운동이 여성들만의 과제는 아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임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남녀불문하고 낙태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려 하고, 노동자 운동도 낙태권 운동을 지지한다면 낙태 합법화 성취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전주현





서평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무역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점증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이해관계 다툼의 승패는 결국에는 군사력의 우위에 많이 좌우된다. 오늘날 강대국 간 갈등이 조성하고 있는 불안정은 1914년이나 1939년처럼 미래에 매우 위험한 결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

제국주의는 교과서 속 역사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지금도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법칙

레닌과 마찬가지로, 부하린은 자본주의가 돌발적 변화, 파국적 격변, 갈등으로 가득 찬 체제라고 봤다. 그러므로 그 체제 하에서 영구 평화는 없다.

부하린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서로 모순된 두 경향, 즉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국가자본주의화)가 결합된 데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의 국가화 경향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 과정의 논리적·역사적 귀결”이다. 자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해야 한다(집적). 그리고 강한 자본이 약한 자본을 흡수한다(집중). 이 때문에 갈수록 경제력이 소수의 대기업들에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대기업들은 점차 유착하게 돼, 국가자본주의가 출현한다.

그러나 자본의 국가화는 부하린이 “세계적 규모의 생산관계 체계와 그에 따른 교환관계 체계”라고 정의한 세계경제 하에서 일어나는 경향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하에서 생산은 갈수록 국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도 자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니콜라이 부하린 지음, 최미선 옮김, 책갈피, 260쪽, 13,000원

본의 집적과 집중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이윤 욕구는 국내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다. 자본들은 국경을 넘어 점점 더 세계적 수준에서 활동하고, 다른 국가의 자본들과 경쟁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두 경향이 빚어낸 결과는 평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졌다. 자본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한다는 것은 세계경제에서 “판매 시장, 원료 시장, 투자처를 둘러싼 경쟁이 격렬”해졌음을 의미한다. “국제적 상품 교환의 증가가 언제나 서로 교환하는 집단들의 ‘연대’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필사적 경쟁과 생사를 다투는 투쟁을 낳을 수 있다.”(77쪽)

자본의 국제화가 낳는 경쟁 격화는 국가화 경향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은 ... 다른 한편으로 ...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의 ‘국가화’ 경향을 강화하고 협소한 ‘국민적’ 집단을 형성한다. 이 집단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언제나 서로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141쪽)

이제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단지 자본들 간의 경제적 경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들의 군사적·영토적 경쟁의 형태로 발전한다. 따라서 세계는 국가와 대기업들이 통합된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들이 서로 경쟁하는 무대가 된다. 이 경쟁의 승패는 각 국가자



니콜라이 부하린은 볼셰비키 지도자로 그의 저작들은 제국주의 이해에 여전히 유용하다

본주의 트러스트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결속력, 군사적·금융적 수단”에 달렸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은 때로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전쟁이 끝나고 강대국들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도, 갈등은 오래지 않아 다시 커진다. “전쟁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시장의 맹목적 법칙의 압력 아래 생겨난 사회의 내재적 법칙”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의미

앞서 언급했듯이, 부하린의 제국주의론은 현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부하린은 “전쟁과 제국주의적 전쟁준비의 필요성” 때문에 부르주아들이 “낮은 부르주아적 개인주의”를 버리고 “생산을 국가가 조직할” 필요성에 동

의할 수 있음을 포착했다.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들 간의 군사적 경쟁 압력이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이 아니다. 동일한 생산양식 내에서의 변화일 뿐이다.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는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의 최고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독점의 직접적 표현이 국가권력이든 ‘사적’ 조직이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든 상품경제(무엇보다 세계시장)가 존재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 관계가 존재한다.”(216~217쪽)

부하린의 통찰은 1930년대 세계 자본주의에서 국가자본주의 추세가 발전하는 과정에 딱 들어맞았다. 전례 없

는 대불황 때문에 각국은 국가 개입 정도를 앞다퉈 늘리고, 폐쇄적 무역 장벽을 쌓았다. 당시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국가 주도 경제의 대표적 사례였다. 물론, 다른 서구 경제들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고 군사력을 증대하려고 강대국들은 개별 자본가들의 필요를 국가의 군사적 목적에 종속시켰다. 그 결과는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이었다.

옛 소련은 1930년대 국가자본주의 추세의 극단적 사례였을 뿐이다. 당대 서방 경제와 달리, 옛 소련은 국내에 대기업과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양적 차이를 과장해 서방 자본주의와 옛 소련이 질적으로 다른 체제였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관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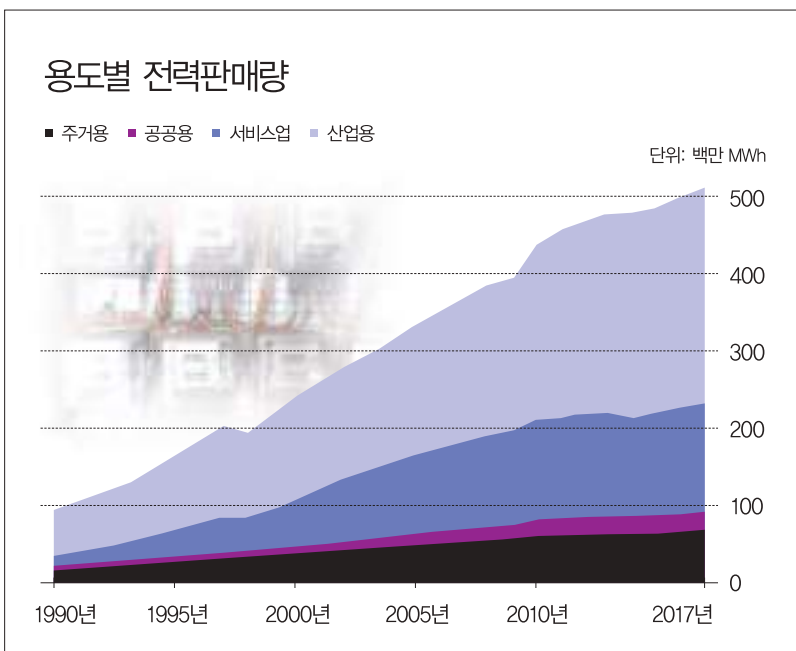
국가자본주의는 지금의 서방 세계에도 해당하는 현상이다. 서방 각국 경제의 적어도 3분의 1이 국가 부문이다. 많은 좌파들의 오해와 달리, 국가 부문도 엄연히 체제 바깥의 존재가 아니라 체제의 구성 요소다.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이고 군사적 경쟁도 자본주의 경쟁의 한 형태라는 부하린의 지적은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부하린의 책은 세계화 속에 경제가 성장한 동아시아가 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이 커진 결과, 외려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무역전쟁, 군비 증강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굴복할 때까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국익 충돌은 악화할 수 있다.

분명 《세계경제와 제국주의》가 나올 당시의 자본주의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이에는 차이도 있다. 그러나 부하린을 비롯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착한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즉,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 논리가 제국주의의 근본 동력이다. 그러므로 궁극적 정치 대안도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익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했었지만 지난 7~8월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말이지 기후변화의 위험이 어떤 것일지 얼핏 보여 줬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일부 사람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걱정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일부는 아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마도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전기 사

용량을 늘려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할 뿐이라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첫째,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전기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는 별 근거가 없다.

현행 누진제는 오로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체의 13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 비율은 지난 수십년 동안 줄었다. 누진제가 증가세를 억누른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도 있지만, 누진제가 완화된 2016년 이후에도 감소세는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중의 실질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이 결코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염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반면, 압도적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55.8퍼센트)과 상업(24.6퍼센트)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분야 전기 사용료에는 할인

▶ 11면으로 이어짐



《트로츠키 1927~1940: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세기의 암흑기”를 비춘 서광

국내에 지금껏 번역된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의 전기로는 아이작 도이처의 트로츠키 평전 3부작과 트로츠키의 자서전 《나의 생애》(품절) 정도를 꼽을 수 있었다. 그중 아이작 도이처의 평전은 여전히 권위 있는 전기로 평가받지만, 저자의 정치에는 더러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토니 클리프의 트로츠키 전기가 국내에 소개된 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트로츠키 1927~1940: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는 토니 클리프가 쓴 트로츠키 전기 4부작의 마지막 권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클리프는 2000년에 작고한 영국 마르크스주의자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창립자였다.

이 책은 트로츠키가 1928년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로 유배된 뒤부터 1940년 멕시코에서 암살당할 때까지, 즉 트로츠키 생애의 후반부를 주로 조망한다. 이때는 “세기의 암흑기”라 불릴 정도로 인류에게 재앙이 닥친 시기였다.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의 주도 아래 반혁명이 시작됐고, 세계경제는 대불황으로 치달았으며,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했고, 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참극으로 빨려들기 시작했다.(트로츠키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에게도 끔찍한 복수가 자행됐다.) 트로츠키의 결정적 공헌(과 부분적 오류)은 바로 이런 정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로츠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마 수많은 역사적 인물 가운데 트로츠키만큼 극심한 왜곡과 비방에 시달린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당시 동·서 양쪽 지배자들에게 트로츠키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 반대로, 노동계급에게 트로츠키의 실천은 지금도 등대가 될 수 있다.

레온 트로츠키는 1879년에 태어났다. 청년 트로츠키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됐고,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지 몇 해 만에 당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후진국 문제에 대해 설교하던 정세에 도전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



트로츠키 1927~1940: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토니 클리프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580쪽, 25,000원

적 공헌인 연속혁명론을 내놓은 때는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으로서 1905년 혁명을 경험한 즈음이었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이 벌어져 차르가 타도됐고, 그해 7월 트로츠키는 볼셰비키에 입당했다. 그는 10월 무장봉기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를 성공시켰다. 적군赤軍을 창설하고 지휘해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소련과 코민테른의 중요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1923년부터 트로츠키는 러시아에서 스탈린주의 반동에 맞서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27년에 당에서 제명됐고 1929년에는 아예 소련 바깥으로 추방당했다. 그 후에도 그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지켜 내고 그것을 혁명적 조직으로 구현하려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트로츠키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가

“세기의 암흑기” 속에서도 중요한 대중적·혁명적 계급투쟁이 벌어졌고, 트로츠키는 망명 중에도 이를 발전시키고자 무진장 애썼다.

트로츠키는 나치 독일에 맞서 뛰어난 전략·전술을 내놔다. 클리프는 이렇게 말한다. “1930~1933년에 트로츠키가 쓴 저작들을 읽어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마치 지은이가 독일에



1920년대 러시아 좌익반대파 지도자들. 트로츠키(앞줄 가운데)는 좌익반대파를 이끌며 러시아 혁명을 사수하려고 애썼다

서 아주 멀리 떨어진 터키의 프린키포섬이 아니라 독일 현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트로츠키는 나치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열정적으로 제안한다. 공산당과 사민당이 힘을 합쳐 공동 행동을 벌여야만 나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당시 코민테른의 기괴한 “사회파시즘”론(사회민주주의가 파시즘의 변형일 뿐이라는 뜻) 탓에 독일 공산당은 사민당과의 협력을 거부했고 결국 히틀러는 총리가 됐다.

트로츠키의 비극이라면 위대한 목적과 빈약한 수단 사이의 격차였다. 히틀러가 승리하기 직전에 독일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수는 많이 잡아야 “600명”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로츠키의 중대한 기여는 현재 각지에서 부상하고 있는 우익과 파시스트에 맞선 노동계급과 좌파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길잡이가 된다.

트로츠키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혁

명적 사건들에 관해서도 탁월한 저작을 내놔다. 이때는 독일과 다르게 코민테른의 “민중전선” 정책이 문제였다. 사회파시즘론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노동계급 정당들이 부르주아 정당과도 동맹을 맺어 혁명적 운동을 가라앉혀 버린 것이다. 소련의 외교적 필요에 모든 것을 종속시킨 이 정책은 스탈린주의 전통의 핵심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혀 있다.

트로츠키가 물려준 또 다른 유산은 ‘스탈린주의와 자본주의에 모두 반대’할 수 있는 틀을 세웠다는 점이다. “스탈린 체제의 광기 어린 공포정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트로츠키는 《배반당한 혁명》이라는 걸작을 썼다. 스탈린 체제를 분석한 이 책은 철저하게 마르크스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유물론적이다. ... 그는 스탈린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용인하게 만든 반(反)스탈린주의 히스테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들 말고도 트로츠키의 유산은

이 책을 정독하며 더 풍족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다. 트로츠키가 당시의 분석과 판단에서 무오류였던 것은 아니다. 저자는 트로츠키의 오류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지적하고 저자 나름의 대안도 제시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트로츠키가 스탈린주의 소련을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 ‘관료적으로 변질된 노동자 국가’로 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오류가 그가 이룩한 업적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 또, 우리는 그런 오류를 놓고서도 배울 수 있고 또 그해야 한다.

저자가 책 끄트머리에 간략히 정리한 트로츠키의 공헌을 인용하며 마무리한다.

“우리는 트로츠키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 그가 스탈린 체제의 관료 집단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의 국제주의가 없었다면,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주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전통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권

▶ 10면에서 이어짐

제도가 적용되는데, 그 할인액만 해도 주택용 전기요금 전체와 맞먹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처럼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구실을 해 왔을 뿐이다. 산업과 상업에 전기요금 할인제를 없애고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게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다.

둘째, 전기 사용량 증가가 기후변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해할 만

한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여전히 전기 생산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 때문인데 발전 부문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자동차 등 수송 부문이 두 번째로 큰 배출원이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전기 사용량과는 별 관계가 없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 잠재량은 오늘

날 사용되고 있는 전기의 총량을 훨씬 웃돈다.

이윤 경쟁

셋째, 그렇다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평범한 노동자·서민도 책임이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보통 사람들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공론화위원회나 뭐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한 편의 쇼였을 뿐이다. 진정한 결정권은 기업 이사회실과 이들의 이윤 획득을 국민경제 성장의 기준으로 여기는 정부 관료들에게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윤과 경쟁 때문에 전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윤 축적이라는 체제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집단은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이 이끄는 근본적 사회 변혁만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이룰 기초

를 놓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할 민주적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잠재력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그 실현 여부가 달려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 조건을 하락시키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변화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장호중

